국수본, LH 의혹 집중지휘

부동산 투기 특수단 구성
"투기 사범 엄정 대응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수사국장이며, 경찰청 반부패수사·중대범죄수사·범죄정보 기능이 포함된다.

또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도 특수단 소속으로 편성된다. 특수단은 LH 직원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 전담팀이 편성된다. 공직자 등 내부 정보 이용,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정 취득, 기업화 불법 거래 등 투기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인 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집중 지휘, 수사 전 과정을 총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으로 첩보를 강화하면서 정부 합동 조사단 수사 의뢰 사건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의혹은 시·도청 전담 수사팀 중심으로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심각성을 인식해 특수단을 구성했다"며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의무호송 전용헬기 '메디온' 둘러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의무후송 전용헬기인 '메디온' 등 군 의료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김제·부안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 쾌거

민주 이원택 의원, 지난 한주동안 현안 4건 총 65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이 지난 1주일동안 김제·부안의 주요 현안 사업 4건에 대한 국가 예산 65억원(총사업비 109억원)을 연이어 확보해 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5일 드론과 IOT센서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축사 및 노후주택 등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국토부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총사업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국도 23호선에 위치한 동진강 휴게소에 소공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새만금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총사업비 30억)을 확보했다.

김제 신풍동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돼 28억원(총사업비 41억)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또,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산 밀 전용 저장시설 설치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2,000만원(총사업비 18억)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들 4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동진강휴게소는 오랜기간 유휴시설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으로, 이번 스마트 쉼터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에 자리한 로컬푸드 판매장이 개량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 전기차 충전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특산품 등의 전시·체험·판매 복합공간도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김제시 전통시장, 축사, 노후주택 등에 드론과 IOT(사물인터넷)센서를 활용, 화재 및 재난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화재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는 스마트 분전함을 운영하고, 자율항행하는 무인드론을 이용해 화재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초기에 감지·진압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제시는 지난 10년간 화재 증가율이 114%로, 화재 발생이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시의 화재 발생률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풍동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김제 신풍동 금동마을 일원의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CCTV설치, 불량도로정비, 금동문화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같은 주택정비 사업 등이 추진돼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산 밀 전용 저장시설 설치사업은 전국 밀 생산의 주산지인 부안군(생산농가 183개 농가)에 밀 전용 저온 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대와 비축체계 구축을 통해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은 이들 4개 사업의 선정을 위해 공모신청 단계부터 최근 최종선정에 이르기까지 국토부, 농식품부 등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성과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도와 시·군 관계자 등 많은 분들과의 협조와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실감하실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대면 서비스 근로자 대상 갑질 방지

민주 이원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지난 5일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손님이나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

안전성평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총 11개소의 보건센터(신체건강 모니터링 10개소, 정신건강 모니터링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이번 '독성평가 분야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흡입에 의한 독성작용 연구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추진하는 연구는 인체에서 나타났던 피해 병변의 재현, 호흡기계/면역계 질환 및 발암 상관성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고의 호흡기질환 유효성 평가 수행기관으로 호흡기질환제품의 효능 평가, GLP 기반의 흡입시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천식, 폐섬유화와 같은호흡기질환의 식·의약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기도내점적투여 로봇기술, 흡입 노출기술 및 다양한 호흡기질환 연구 모델 확보로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이규홍 박사(사진)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환 간 인과관계 확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법률적 판단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역학적 상관 관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독성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식·의약품, 화학물질 등 안전성평가 연구 및 독성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차세대 독성평가 원천기술 개발 및 대체독성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부안군 왕등도 일원해역 불법어구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전북도가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 기반을 위해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해 지난 2일 계고서를 공시송달했다.

도는 부안군 일원해역에 불법 설치된 불법어구 등을 철거해 관내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지난 5일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해역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 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불법 어구 설치와 과다 부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는 사전 계도·홍보 등을 통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이행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방치 폐기물 해결 위해 행정대집행 법제화

민주 윤준병 의원,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방치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행정대집행 근거 조항이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폐자동차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도 입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자동차·전자제품 해체·재활용 산업은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으로의 성장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의 사전 예방,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냉매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